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

2026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대전의 미래를 말하자!

에너지 · 교통 · 먹거리 · 평화 · 평등

5 개 부문 핵심 요구안 발표 및 정책 토론

일 시	2026 년 5 월 19 일(화) 오전 10:00 ~ 12:00
장 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 (대전 서구 문정로 148, 601 호)
주 최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

순 서

시 간	내 용	발표자
10:00~10:10	여는 인사 및 취지 설명	사회: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0:10~10:25	에너지 발표	한재각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0:25~10:40	교통 발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
10:40~10:55	먹거리 발표	송순옥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활동가)
10:55~11:10	● 평화 발표	이대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장)
11:10~11:25	● 평등 발표	끼리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11:25~12:00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	전체

|

목 차

순 서 2

발표 1 지역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 5

현황과 문제점 / 정책 방향 / 주요 내용 6

발표 2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 8

현황과 문제점 / 해결방향 / 제안 내용 9

발표 3 공공급식부터, 비거니즘 기반의 기후식단으로 전환하자 12

현황과 문제점 / 전환의 필요성 / 정책 방향 / 주요 내용 13

● **발표 4 방산 도시를 넘어 평화 도시로 16**

현황과 문제점 / 해결 방향 / 제안 내용 17

● **발표 5 모든 시민이 평등한 대전을 위하여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20**

성소수자 실태조사 / 혼인평등 소송 / 제주평화인권헌장 / 민선 9기 요구 21

발표 1

**지역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

한재각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현황과 문제점

1) 전국적 현황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절박해지면서, COP28 에서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3 배 확대를 국제적으로 결의하였음. 2024 년, 한국의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32.4GW 로 크게 늘었지만, 발전량 비중은 6.9%에 불과함. 따라서 정부도 2035 NDC 를 통해서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 로 확대하기로 함.

한편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야기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정부가 제시하는 3 대 방향과 10 대 과제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의) 재생열 전환" 과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소유·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간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민영화 심화될 것이 우려됨. 하지만 시민들의 대부분(77%)은 재생에너지를 공공이 나서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5 년 갤럽 여론조사), 지역에너지공사 등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규정한 <공공재생에너지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었음.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분산전원을 확대하여 송전선로 건설 필요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음. 또한 지방공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책적·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음. 2024 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2024.2.7.)과 2025 년 4 월 □지방공기업법□ 제 2 조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명확해졌음.

2) 대전의 현황

현재 대전의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이용 규모는 대단히 낮으며(2024 년 현재, 지역내 태양광 전력 공급율은 1.6%에 불과함), 대전시는 제 6 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2025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율을 3.4%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24 년 실적은 2.5%에 머물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최근 발표된 제 7 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LNG 열병합 및 수소혼소 발전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는 대단히 소극적임.

대전은 전력자립도도 대단히 낮으며(2023 년 현재, 3.1%), 충남 석탄발전소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송전탑을 통해서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일부 지역을 경과할 계획이 알

러지고 있어 전력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한편 최근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이 설비를 대규모로 증설을 추진하면서(113MW → 495MW, 약 4 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원으로 전력자립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음. 지역 내 열공급을 천연가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생열 전환" 방향과도 모순됨.

대전시는 2019 년에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조사를 통해서 61 개 곳 6.1MW 의 잠재력을 확인하였으나 22 곳만 추진되어 있는 상황임. 작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25 년 11 월 시행), 제 7 차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은 설치 의무가 있는 공영주차장을 25 개소(환경운동연합 추산 230 개)로 명시하고, 잠재량을 12MW(환경운동연합 추산 79.6MW)로 추산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정책 방향

- 대전시의 낮은 에너지자립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2030 년까지 전력소비량의 10%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충당한다.
- 대전시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공적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재생에너지의 기반을 확립하고 시민참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한다.
-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 저수지'로서 공공 배전망 ESS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

1) 2030 년까지 지역 전력 소비량의 1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자

2024 년 대전 전력소비량의 10%를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경우, 대략 800MW 의 설비용량이 필요함. 현재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량과 확인 가능한 잠재적 유휴부지의 발전 설비량을 추산하여 종합해보면 864.1MW 으로, 10%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

2) <공영주차장 태양광의 공공성 강화와 주민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

충남도와 경기도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음. 환경운동연합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 제안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 대상인 공영주차장의 범위 확대 (기준을 80 면에서 50 면으로 강화)
- 공공기관과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50% 이상 설치 의무화
- 대상 공영주차장의 실태조사와 연도별 설치 목표 등의 계획 수립
-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촉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 임대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협약을 통한 재원으로 에너지복지 기금 설치

3) 지역에너지공사를 설치하고 공공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자

대전시가 직접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이 수익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대전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전담시키면서, 이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관할·추진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서울에너지공사 및 제주에너지공사의 사례 참조).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의 50%를 대전에너지공사를 통해 공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재원은 약 800 억원 정도로 추정됨(1MW 당 최대 20 억원, 40MW 설비). 2023~2024 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1,764 억원으로, 1 년 순세계잉여금의 절반 정도만 동원하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20 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4) 지역 공공 배전망 ESS 사업을 추진하자

설립되는 대전에너지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계통 접속 지연 방지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토대로서 배전망 ESS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배전망 85 곳을 대상으로 2030 년까지 340MW/170MW 용량의 ESS 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선제적으로 배전망 ESS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발표 2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

1) 현황과 문제점

- **초고유가 사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통비 부담** : 중동전쟁으로 인한 초고유가 사태로 서민들의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음. 가계 소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서고, 소득이 낮을수록 교통비 지출 비율이 더 높은 역진적인 구조를 보임. 특히 소득 1 분위의 교통비 지출 비율은 11.9%에 달함.
- **탄소 배출 주범과 자가용 의존** : 대전시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에 달하지만, 대중교통 분담률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22.7%에 머물러 있음.
- **컨트롤타워 부재와 타슈 연계 부족** : 대전교통공사는 여전히 도시철도 운영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타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등 전체 공공교통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준공영제의 구조적 비리와 투기 자본의 침탈** : 노선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 업체가 독점하여 유령 직원 등재, 채용 장사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은 2015년 383억 원에서 2022년 1,166억 원으로 폭증함. 게다가 전체의 약 6분의 1에 달하는 버스 회사가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의 손아귀에 넘어가 약탈적 금융 기법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고립** : 2023년 말 기준 대전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6.8%에 불과하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은 37분 36초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2) 해결방향

-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대중교통 전환의 '골든타임'** :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맞물린 버스 체계 개편 시점이 곧 대전의 100년을 결정할 '골든타임'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면적인 교통체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함.
- **고유가 대응 및 필수재로서의 공공성 회복** :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비상 대책이 필요함. 교통을 의료나 주거와 같은 수준의 '필수재' 공공성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함.
- **기후·불평등 동시 대응** : 대중교통 분담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도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가량을 감축할 수 있음. 가계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
- **재정 구조 및 관점의 대전환**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적자 타령을 멈추고, 시민의 이동권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필수적인 공공 지출로 관점을 혁신해야 함.

3) 제안 내용

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는 공공 교통 대책 수립

- 대중교통 요금 동결 및 '월 1만원 공공교통 정기권' 즉각 도입으로 서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경감. (연간 1,072 억원 소요 / 교통시설특별회계→공공교통 특별회계 전환 / 중앙·지방 50:50 분담)
- 어린이·청소년·청년 무상교통 도입 — 만 6~12 세: 6 억 4 천만원 / 만 6~18 세: 205 억원 / 만 6~24 세: 310 억원
-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민에게 타슈 무료 이용권 및 대중교통 추가 포인트 지급
- 교통유발부담금 현행 대비 3~5 배, 도심 내 공영주차장 요금 2 배 인상

② 공공교통 컨트롤타워 구축

- '대전교통공사'를 '공공교통공사'로 전환 — 공공이 노선권과 관리권을 직접 행사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

③ 버스완전공영제 단계별 이행

1 단계 — 공공성 기반 구축

- 대중교통공사를 공공교통공사로 전환, 버스·도시철도·타슈 등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위상 부여
- 운수 노동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실제 이용자와 시민사회·전문가·정치인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실질적 의결·통제기구로 위상 격상
- 비리 업체와 사모펀드(PEF) 등 투기 자본을 강력 규제하고 퇴출 /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감사 및 조사권 부여

2 단계 — 트램 연계 노선 개편 및 직접 운영

- 도시철도 2 호선(트램) 완공 시점에 맞춰 중복·비효율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
- 환승 거점 등 핵심 노선부터 교통공사가 직접 운영 / 외곽 지역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과 '공공형 택시'로 과감히 전환

3 단계 — 완전공영제 완성

- 차량, 차고지 등 필수 자산을 공공이 매입·소유하여 사유화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완전공영제 시스템을 완성

④ 공공자전거 '타슈' 위상 강화

- 2026 년 말 타슈 7,500 대·대여소 1,500 개소, 2030 년까지 9,500 대·대여소 4,500 개소를 확충하여 수송분담율을 현재의 2 배 이상 확대
- 구별 타슈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15 세 미만 청소년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를 확대
- 타슈의 적정 운영관리인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개선 /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타슈운영센터 민영화 방지

⑤ 편안하고 안전한 무장애 정류장 구축

- 스마트 캡슐형 쉼터 도입 : 냉난방기·공기정화장치·공공 와이파이가 탑재된 '밀폐 캡슐형 스마트 쉼터'를 환승 거점 등 주요 정류장부터 도입
- 교통약자 물리적 접근성 개선 : 정류장 연석 높이를 표준화하고 보행 장애물을 제거하여 '무장애 정류장' 개편 즉시 시행
- 버스 대기 환경 개선 : 캡슐형 쉼터 설치가 어려운 정류장에는 온열 의자(스마트 벤치)·에어커튼·쿨링 포그를 확충

⑥ 통합 공공교통 체계로 수송분담률 50% 달성

- '버스, 도시철도 1·2 호선, 타슈, PM, 도보'를 통합적 체계 구축 — '자가용보다 편한 공공교통'을 실현하여 탄소 배출 획기적 저감
- 공공교통-공공의료 통합 노선 구축 : 취약계층 밀집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대전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직통으로 잇는 '메디컬 버스'를 신설하여 물리적 이동 장벽을 제거. 주거·교통·의료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통합적 기본권 보장 체계를 확립해야 함.

발표 3

**공공급식부터,
비거니즘 기반의 기후식단으로 전환하자**

송순옥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활동가

1. 현황과 문제점

1) 세계적 현황

- 식량 생산은 기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함. 특히 육식 위주의 먹거리 생산체계를 이끌고 있는 축산 부문이 문제임. 축산 부문은 전체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를 배출하며, 목초지와 사료 생산에 농업 용지의 4분의 3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 반면에 식물성 식품은 일반적으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음.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의 협의체)와 UNEP(유엔환경계획)는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파리 협정의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식량 시스템의 전환(Food System Transformation)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함. 육식 위주 식단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전환할 경우, 축산에 사용되던 방대한 토지를 다시 숲으로 되돌리면서('재야생화') 막대한 양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대한 탄소저장고가 됨.
- UNEP은 현행 농업 방식이 생물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특히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으로 인한 질소 오염은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 대신에 생태계 서비스(수정, 해충 조절, 수질 정화)를 복구하는 '농생태학(Agroecology)'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음.

2) 해외 사례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는 2023년 유럽 수도 중 최초로 '식물성 식단 조약(Plant Based Treaty)'에 서명하며 전 세계 공공 먹거리 체계의 혁신적 모델이 됨. 이 조약은 공공기관 급식에서 식물성 식품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축산 농장 건설을 억제하며,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토지 복원을 병행하자는 제안을 포함. 에든버러시는 이 조약의 실행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 중.
 - 모든 초등학교에서 주 1회 '고기 없는 날'을 운영, 중학교에서는 주 1회 메인 메뉴 전체를 100% 식물성으로 제공
 - 시 산하 모든 급식 시설(학교, 요양원 등)에서 매일 비건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
 - 시 산하 케이터링 팀을 위한 쿠킹 스쿨을 개설하여, 조리사들이 비건식단(식물기반 식단)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맛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시행 중
 - 시청 내부 회의와 공공 행사의 케이터링을 100% 식물성으로 전환하라는 시민 청원과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시의회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 요구 중
- 네덜란드는 낙농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서 육식을 기본값에서 제외.

- 수도 암스테르담 시청은 행사 오찬에서 무조건 채식은 기본으로 하고 육식을 사전 신청 옵션으로
-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육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며 환경 파괴를 유도하는 상업적 자극을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 포르투갈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학교, 병원, 교도소 등) 급식에서 완전 비건 옵션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제화해 채식을 배려가 아닌 법적 '권리'로 규정.
- 독일 베를린의 대학들은 메뉴의 68%를 완전 비건식으로, 28%를 채식으로 편성해 전체 식단의 90%를 식물 기반으로 채움.
- 일본에서는 주변 식료품점이 사라져 주민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에 직면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문을 닫은 식료품점을 대신해 '공공형 마트'를 세우고 있음. '공공형 마트'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업체를 유치하거나 주민 주도로 점포를 위탁 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3) 한국/대전의 현황

- 현재 한국에서는 채식 요구를 채식 환경 조성 지원, 채식선택권 보장 등 개인의 기호나 선택의 영역으로 축소하여 시행 중임. 또한 기후위기와 관련된 먹거리 조례는 기후정의(불평 등 해소)의 철학 없이 단순히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관점이나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관점에 갇혀 있음.
- 식량생산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식재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함. 대전에는 공공기관의 식품/식자재 조달(이하 공공식품조달)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식품조달이 일반식품 산업의 관행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 공공식품조달 조례를 통해 식품공급 시스템의 환경성 개선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농촌 지역이 많은 전북도와 같은 곳에서 식료품 자체를 거주지 인근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식품사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식품사막이란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일컫음).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도 식품사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도시에서는 편의점 등은 인접해 있지만 신선한 식자재, 특히 야채와 과일 등의 신선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정부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스마트팜이 가진 '에너지 집약적' 구조와 '화학적 양액' 의존도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움. 소농 중심의 농생태를 지원할 경우,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탄소 격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지원이 저조함.

- 현재 대전시는 2025년 기준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서구는 81개, 대덕구는 5개, 중구는 17개, 동구는 4개의 축산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는 3,349두수, 대덕구는 99두수, 중구는 461두수, 동구는 77두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들은 대전의 수질과 수생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외 대청호 녹조의 핵심 유입원인 옥천군은 공공데이터포털의 축산 현황 및 축산물종합정보 통계에 따르면, 대청호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옥천 유역(옥천읍, 군북면 등)에만 수백 개소의 우사가 밀집해 있고 한우 사육 두수는 약 2만~3만 두 규모임. 보은군 역시 2만 두가 넘는 대규모 한우 사육 지역으로 대청호로 유입되는 북부 지류 인근 농가들의 축산분뇨가 장마철 비점오염원임.
-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다양성 회복,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축산업의 축소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함

2. 식량생산-먹거리 체제 전환의 필요성

- 1) 현대 육식 기반 식량 생산시스템은 "가난한 자들의 땅과 물,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유한 자들의 식탁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질병의 고통은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음. 지구행성경계를 지키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식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식물 기반(비건식)이 기본값이 되고 육식이 옵션이 되는 사회'로 국가 먹거리 생산 체계를 전환해야 함.
- 2) 지역 먹거리 체제의 식물기반으로 전환은 탄소 감축은 기본이고 환경불평등, 분배불평등, 노동의 불평등, 보건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요 열쇠가 된다. 생태계 복원, 소농의 판로 확보 및 비건(식물성 기반) 식단 관련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회복과 안정화를 가져올 것. 더불어 육식 위주의 식단이 가져온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어 건강보험이 더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음.
- 3) 식량 생산체계와 공공 먹거리 정책의 전환은 착취와 억압의 일상에서 공존과 복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복원해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됨. 더불어 서식지 복원의 지구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과 메탄가스 배출이 사라지면서, 임계점을 넘었던 질소·인 순환과 해양 산성화 지표가 안전 범위로 회복됨. 동물을 '자원'이 아닌 '지구별 생태계 구성원'으로 이웃 생명으로 볼 때 비로소 지구 행성 경계는 안정권에 들어서게 됨. 그래도 되는 존재 동물'을 남겨둠으로써 '폭력의 일상, 착취와 혐오의 일상, 전쟁의 일상'에서 '공감의 확장'으로 평화의 인류 문화를 다시 쓸 수 있음. 억압과 지배에서 서로 돌봄의 문화로 문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 공공에서 육식을 지양하는 것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사회적 기본값"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 됨.

3. 정책 방향

- 1) 시민의 건강권과 보편적 권리로서의 먹거리 전환, 기후위기에 있어서 식품공급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이유, 불평등의 해소 이유로 식물성기반 식단의 전환은 공공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공적 성격을 갖는 공간인 공공시설에서 식물성 기반 식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제공한다.
- 3) 대전시 내 '식품사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마트'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주권을 확보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 4) 대전시 내 농민의 농생태 전환을 지원하며, 특히 축산 농가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 축산 농장 건설을 억제하며,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토지 복원, 생태계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병행한다.

4. 주요 내용

- 1) 공공기관 구내식당부터 기후비건급식을 도입하고 조례를 제정한다.
 - 대전시와 5개 구청 및 그 산하 기관들의 구내식당(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주2회 100% 식물성 기반(비건 메뉴) 식단 제공, 평소 식단의 70%는 식물성 기반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비건 메뉴 이용자에게 공중보건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몫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 시·구 주관 모든 행사(간담회, 축제)에 제공되는 식사 및 간식을 비건 메뉴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의 사례 참고).
 -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구매하는 식자재의 50% 이상을 농생태학에 기반하여 농사를 짓는 대전 및 인근 지역 농가로부터 우선 구매한다.
 - 이상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대전시 공공기관 식품 조달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약칭, 공공식품조달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급식의 생태적 책임을 법제화한다.
- 2) 공적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기후식단 접근성을 증진하고 식품사막을 예방한다.
 - 주거지 인근에서 지역의 친환경 채소와 과일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형 마트'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식품사막' 현상을 예방한다. 구매자에게 공중보건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몫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전시의 '식품사막'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대전시 대중교통(버스 등),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시정 전광판에서 고탄소 배출 제품(공

장식 축산물, 화석 연료 차량 등)의 광고 노출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 시·구청이 발행하는 모든 소식지와 홍보물에 비건 레시피와 저탄소 식단의 환경적 가치를 상시 게재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한다.
- 민간 식당에서 비건 메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건 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식당 인증제'와 식당 메뉴판에 기후/비건 표시제를 도입을 권고한다.

3) 대전시 내 축산농가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실경작 소농·가족농 중심으로 농생태 회복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공공형 마트, 생태 농업 농가의 공공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수립한다.

- 대전시 내 농경지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지주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실경작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실경작자 지원을 확대한다.
-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 탄소 흡수력을 높이는, 적극적 탄소 감축 농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전시 내에서 적극 발굴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 <저탄소 농업 직불제> 등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 생태 농업, 농산물을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공공형마트'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공식품조달조례에 포함한다.
- 축산 밀집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형 농생태 농가로 정의로운 전환기금 지원
 - 전환기금 지원 조례를 제정 : 영세 축산농가가 폐업하거나 저탄소 농업 시설, 기타 시설로 전환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공공에서 지원한다.(갑천 습지보호지역, 노루벌, 갑천누리길 등 기성동의 천혜의 생태 자원과 연계하여 기존 축사 부지를 식물원, 주말 치유 농장, 반려견 생태 파크 등)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소득 보장 (생계 안정)공익직불제 내 '탄소중립·농생태 직불금' 신설하여 축산 두수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농가, 화학비료 대신 완숙 퇴비 유기농법을 도입하는 농가에 감축분 만큼의 소득을 현금으로 직접 보전한다.
 - '기후·환경 서비스 직불제' 등으로 농민을 오염 유발자가 아닌 '생태계 서비스 제공자'로 재정의 하고 하천변 식생대 조성, 암모니아 가스 및 분뇨 유출 모니터링 등 생태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농가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 지급한다.
 - 가축분뇨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 마련. 축산 밀집지역의 농가의 분뇨를 전량 수거하는 소규모 고온 미생물 공동 메탄소화조를 설치.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여 농가 에너지 자립을 돕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 대청호·갑천 상류 브랜드 로컬푸드 육성한다. 축산을 축소하고 유기농 채소 재배로 업종을

바꾸는 농가에 대전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로컬푸드 매장 우선 납품권 및 인증 브랜딩을 전폭 지원한다.

- '대전의 축산농가 정의로운 전환' 운영하여 농민들이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전환의 주체로서 정책 설계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한다.

● 발표 4

**방산 도시를 넘어
평화 도시로**

이대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장

1. 현황과 문제점

1) 전국적/지구적 현황

전 세계는 2024 년과 2025 년을 거쳐 2026 년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전쟁 위기와 군비 증강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2 년 넘게 지속되며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국제 사회는 목도하고 있다.

중동 정세는 더욱 악화되어, 2026 년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침략과 이에 따른 이란의 반격이 맞물리며 지역 전체가 전면전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급증을 불러오고 있으며, 2025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지구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 또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2025 년 국방예산은 약 62 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며 사회복지·기후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2) 대전의 현황과 문제점

대전은 한국의 군사·방위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 중 하나다. 유성구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위치해 있으며, 각종 방산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대전 지역에 군집해 있다. 최근 정부의 방산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대전시도 방위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방산 기업 유치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주적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군사주의와 평화 의제는 대전 시민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군사 예산이 늘수록 복지예산이 줄고, 방산 도시가 될수록 지역 정체성이 그에 종속된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적극적 실천이다.

2. 해결 방향

- 대전시가 평화도시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방위산업 유치 및 확대를 지역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적 공론화와 민주적 결정 절차를 요구한다.
-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소음·안전·환경 피해에 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

- 한반도 평화와 국제 반전 의제를 지역 시민사회와 연결하는 평화교육과 연대 문화를 확산한다.

3. 제안 내용

1) 대전시 평화도시 선언과 <평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자

'평화도시' 선언은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도시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정치적 결단이다. 국내외 일부 도시들은 비핵·평화도시 선언을 통해 군사 기지 유치 반대, 핵무기 반입 거부, 평화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실현해 왔다.

- 평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 "우리 도시는 전쟁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원칙을 조례 첫 줄에 명시하고, 5년 단위의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 평화 교육 의무화 및 '기억의 공간' 조성: 학교 내 평화·인권·비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대전 내 전쟁의 상흔(예: 골령골 학살 터 등)을 평화 교육과 화해의 공간으로 완전히 복원하고 지원
- 방산 클러스터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평화적 전환' 지원: 대전 소재 방위산업체들이 국제법상 금지된 살상무기(집속탄 등)를 생산하거나 집단학살이 자행되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시의 재정 지원과 공공 부지 사용을 금지. 군사 기술을 민간의 안전·재난 대응·환경 보호 기술로 전환하는 연구에 인센티브 제공
- 대안 경제 모색: 방산 의존 경제 구조 대신, 사회적경제·녹색산업·돌봄산업·문화산업 등 비군사적 지역 경제 전략을 병행 검토

2) 방위산업 도시화에 대한 공론화와 민주적 결정을 요구하자

- 방산 정책 공개 원칙 확립: 대전시가 방산 기업 또는 군사 연구기관과 맺는 협약, 지원, 인프라 제공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
- 방산 유치 결정 시 주민 참여 절차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산 관련 시설 유치나 협약 시, 주민공청회 또는 시민참여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

3) 군사시설 인근 주민 피해에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하자

- 피해 현황 실태 조사: 대전 인근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환경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시가 직접 추진
- 주민 피해 대응 창구 마련: 군사 시설 관련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설치

4) 한반도 평화와 국제 반전 연대를 지역에서 잇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대전시의회가 국제인도주의법에 근거하여,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공격 중단과 인도적 지원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평화 연대 도시 네트워크 참여: 국내외 평화도시 네트워크에 대전시가 참여하여 반전·평화·비핵 의제를 공유하고 공동 행동을 추진
- 지역 내 평화 공간 조성: 시민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평화교육관, 평화도서관 코너, 시민 강좌 등)을 지원

● 발표 5

**모든 시민이 평등한 대전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끼리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지난 4월 25일, 제 3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무사히 진행되었다. 혐오세력이 미리 행진경로에 현수막을 달았고, 행사 당일에는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축제가 있기 며칠 전에는 대전시 법률통계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 우리 축제의 '동향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우리는 대전시가 인권증진 업무의 일환으로 축제와 협력한다면 언제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방문 목적, 업무 내용, 협조 사항이 담긴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공문 발송이 어렵다고 답하면서, 현장 방문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정말 인권 증진의 목적으로 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축제를 사찰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진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10년 만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¹⁾ 여전히 한국의 성소수자의 삶은 녹록치 않지만, 이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및 대응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실태조사 (2026.4.9.) 주요 결과

- **성별정체성:** 트랜스남성의 47.1%, 트랜스여성의 41.8%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일상적 용무를 포기한 적 있음. 트랜스젠더 남성의 59.4%, 트랜스젠더 여성의 76.6%가 법적 성별정정 의향이 있으나 의료 비용과 법적 절차의 어려움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못함.
- **교육:**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는 교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댄 표현을 경험했고, 학교 내 지원체계를 통한 문제해결 기대도 낮음.
- **고용·노동:** 트랜스젠더는 구직 과정에서 더 높은 장벽을 경험하며,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 일터에서도 혐오표현, 복지제도의 부당한 대우, 업무 배제 등 다양한 차별이 나타남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음.
- **혼인·가족:** 성인 응답자 56.6%가 동성결혼이 가능하다면 혼인 의향이 있으며, 51.5%는 자녀 계획이 있거나 고려 중이라고 답함.
- **정신건강:** 성인 45.8%, 청소년 69.0%가 우울 증상이 의심되며, 트랜스젠더의 52.3%가 최근 1년간 자살을 고민하였고, 성인 응답자 11.6%가 은둔 상태로 추정됨.

성소수자 부부를 위한 혼인평등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과 수도권 6개 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중 9개 사건은 법원에서 심문기일도 잡히지 않은 채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지난 4월 27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는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취소소송' 심문기일이 열렸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소송 이후 11년만이다. 이번 부천지원의 심문기일은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된 것이다. 지난 4월 8일에는 3쌍의 동성부부가 부산, 대구, 울산 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취소를 신청했다. 앞으로 전국에서 더 많은 동성부부가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고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에 나서길 기대하며, 가족구성권의 확대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체계 등의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5월 10일, 노동부에서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 가족돌봄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 사용(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휴가는 10일)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를 기존 법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에서 벗어나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비친족 가구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이러한 변화는 수 많은 성소수자, 활동가, 연구자, 시민의 마음을 통해 이어져왔다. 지역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²⁾ 전국에서 차별 행정, 혐오 세력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2018년 9월 8일, 첫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혐오세력의 불법 집회 방해로 축제 참가자들이 몇 시간 고립되어 있었다. 이후, 축제를 방해한 몇몇 사람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23년 6월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을 대동하여 대구광역시경찰청과 충돌을 일으켰다. 대구퀴퍼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2월 19일 2심 선고로 대구시에 7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기나긴 법적 다툼이었지만, 대구시의 판결로 인하여 퀴어문화축제 방해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행정 차별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전광역시도 다른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성평등기본조례'를 타 지역보다 먼저 선구적으로 만들었다. 제 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2항의 다.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을 규정했다. 이 부분이 알려지자 일부 기독교계의 난리와 여론전, 여성가족부의 압박까지 나오면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 시민사회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대전시를 강력 규탄했지만, 이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위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존재를 숨겨야 생존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 낙인, 차별, 혐오, 심지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소수자 당사자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12월 10일, 제주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이 포함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특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혼인 여부, 가족형태,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비록 '성별 정체성'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성적 지향'이 함께 포함된 것은 값진 성과다. (광주광역시, 충청남도도 인권헌장이 존재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빠져있고 충청남도는 포함되어 있다.) 인권헌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인권 조례의 경우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다 마련되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25곳만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101곳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인권 조례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2017년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시도한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가치인 인권이 조례 제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과 예산이 필요하다.

성소수자도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며 살아간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싶기도 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고 싶을 수도 있다. 입양이나 출생을 통한 자녀 양육을 하고 싶고, 직장에서 다양한 휴가 제도도 사용하고 싶다.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 혹은 내가 태어났을 때 지정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순 없다.

6월에 새로 선출 되는 민선 9기는 포괄적 차별금지조례 제정과 함께 인권 조례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조례 제정과 시행 규칙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은 시작할 수 있다. 지역 정주 여건이 단지 일자리와 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감각이 형성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지역퀴어문화축제, 퀴어프렌들리 공간, 성중립 화장실을 생기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 차별금지조례 제정으로 성소수자에게 '여기서 당신으로서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신뢰와 안전함을 제공해야 할 때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실태조사」, 2026.4.9. 2) 서울퀴어문화축제, 「우리가 만든 변화의 지도 - 퀴어문화축제: 차별행정에 맞서온 기록」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